

다산포럼



김재민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완성상태(完成態)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말로 알려져 있다. '목적'이나 '끝'을 뜻하는 '텔로스(telos)'에 '엔'을 뜻하는 엔(en)이 결합한 말인데 '끝 혹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스승 플라톤이 기하학을 모델로 철학을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을 모델로 삼았다. 엔텔레케이아는 생물의 성체(成體)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령 도토리는 참나무로 다 자라야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도토리의 엔텔레케이아는 참나무다. 아기의 엔텔레케이아는 성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참나무로 성장해야 할 운명인 도토리나, 성인이 되어야 할 아기는 아직 뿔이 부족한 존재다. 한국의 논자 중에는 이런 엔텔레케이아를 염두에 두고 사회 비평을 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대개는 자신의 유학 경험 또는 독서나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 등이 원천이다. 흥미로운 건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

선진국의 논의 혹은 사례 중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끌어오고 조합해서 엔텔레케이아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흔히 독일식 선거제도, 프랑스의 주거 정책, 영국의 주치의 제도,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노동 정책 등 '우수한' 사례들이 거론된다. 이와 동시에 많은 논자들은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거나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논증을 동반하곤 한다. 그 근거로는 선진국의 엔텔레케이아, 즉 완성된 선진국 모습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든다. 그런데 과연 완성된 선진국 같은 게 있긴 한 것일까?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그런 건 현상일 뿐이고 몇몇 요소를 갖춘 선진국이 있지만, 이들조차 다른 몇몇 부문은 한참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부문에서의 선진국, 혹은 선진국의 엔텔레케이아, 선진국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지향이자 목표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회, 자신의 문제가 인간의 보편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해결하려 애쓰는 사회, 남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객관화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남에게 문제를 문제로 포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 아닐까. 사실 한국은 수많은 '문제'들로 들끓고 있다. 조용할 날이 없고,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노동, 여성, 환경, 세대, 기후, 난민, 역사

등의 문제를, '수입한 문제'가 아닌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로 자각하고 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를 발굴하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최근까지 한국의 지식인은 서양에서 정립한 문제, 혹은 서양을 거쳐 수입한 문제, 서양에 근접한 비서구권 국가가 문제시한 문제만을 문제로 여겨왔던 것 같다. 자신이 유학하고 돌아온 본국, 자신이 주로 읽은 언어권, 그곳의 문제만 문제고, 이곳의 구체적인 문제는 문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폄하해왔던 것 같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는 가장 무지하다고들 한다. 한국이 아닌 미국의 경제 현실을 데이터로 삼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아래 있다. 사람이 문제의 중심에 있기에 구체적인 역사와 궤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문제를 풀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잘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외면한 채, 문제를 위한 문제만 그려 보려 했던 건 아닐까? 허망하게도 말이다. 이미 있어서 가져와 쓸 문제들이란 없다. 우리 문제에 가져다 쓸 방법론이란 없다. 문제는 설정하는 자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방법은 해결을 위한 노력의 흔적일 뿐이다. 어디서 가져다 쓸 생각 말고, 직접 발명하라. 본받아야 할 모델 따윈 없다. 직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역사는 흥망 성쇠의 궤적으로 가득 차 있다. 영원한 선진국은 없다.

청춘 특특

사전적 의미의 양성평등에 충실할 수 있다면



김성우
조선대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2년

지난달 15일 한 빌라에서 3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가 흥기에 급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층에 사는 이웃이 흥간 소음 등의 이유로 아래층 주민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여경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데 이어, 남성이 곧바로 현장에 합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은 비명 소리를 듣고 빌라 건물로 들어갔다가 현장을 벗어나던 여성 경찰관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면 단순히 여경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이 글을 작성하며 '여경 무용론, 언론이 공범이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한편에서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도망친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는데, 누가 이 이슈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나. 도망에 '성별'이 결정적이었을까. 그보다는 순경이라는 점이 더 큰 원인이었다. 여자니까 도망쳤다고 말하며 조롱하는 것은 또 다른 여성 혐오에 불과하다. 제도적 차별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수자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펼친 것은 인권 선진국들의 공통된 역사다. 경찰의 임무 중에도 여성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질'도 중요하게 간주돼야 할 것이다. 여경이 무릎을 땅에 붙이고 팔 굽혀 펴기 등의 체력 검증은 한다는 사실은 SNS에 널리 퍼져 누군가의 염려를 사고 있다. 남성만 모두 뺄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체력이 뛰어나고 직업적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

다.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 직업 특성에 상관없이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직책을 맡는 것? 사전적 의미는 뉘앙스가 다르다.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의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가. 얼마 전 영화진흥위원회가 도입한 '양성평등 가산점' 제도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작가가 여성인 경우 2점,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3점의 양성평등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한다. 지난 공모전에서 15개의 상 가운데 11개가 여성에게 주어졌던 것이 모두 이 가산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여성 지원자의 역량이 더 뛰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기계적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이 결과를 비판하고 여성 창작자들의 역량을 평가절하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성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여성 혐오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기고

에너지 전환, 보다 신속하게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10월 31일부터 2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 한편에서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을 더 높여 주고 있다. 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공급 체제 구축만이 화석연료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깨끗한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에너지 원은 지금도 70% 이상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구성돼 있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EU의 천연가스 수입량의 4분의 3 이상을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아, 카타르 등 4개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러시아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에너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에 의한 에너지의 현지 공급과 저

장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있다. 기후 위기에 의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했던 세계 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깨끗한 에너지 용량의 증가량을 지금의 네 배로 늘려야 한다. 사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깨끗한 에너지가 보급되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폭으로 비용이 낮아졌고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등은 에너지원이 기본적으로 '무료'라는 점도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깨끗한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끌어내리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환경에 따라 불안정하다는, 즉 기상 변화로 에너지 공급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단기 및 장기의 에너지 저장 체제의 구축·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단기간 축전 요구는 이미 전력회사 규모의 축전지로 채울 수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서는 깨끗한 에너지의 일일 발전 주기(사이클)를 원

활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배터리 축전 설비를 갖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기간 에너지 저장은 지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는 있지만 서서히 그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천연가스가 일시적인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양수 발전, 바이오메탄, 그린(탄소제로)수소 등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들이 계속 발전돼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논의는 공급(에너지원)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요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에너지 효율과 현명한 수요 응답 시스템(Smart demand response system)으로, 공급과 가격의 변동을 관리해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안정시키고 공급 및 전력 가격의 변동에 수요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와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는 비용 및 경제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등 여러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감안할 때 싸고 안정된 에너지 시스템을 전제로 한 에너지의 전환은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 산업 전반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에너지 비용이 보다 저렴해져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국토 균형 발전 위해 '에타 제도' 개선해야

광주일보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에타 제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에타 제도는 오히려 국토 불균형 발전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들을 분석, 에타가 인구·경제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과 영남권에 유리하게 진행돼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마침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를 반영해 최근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국비 및 지방재정 편중으로 고착화된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에타

당성조사 제도와 정부 공모 방식, 투자 심사 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간 에타 통과 및 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 및 영남권에 편중됐으며,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및 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정 지역 편중투자로 인해 현재의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위권 지역 에타 심사 대상 사업의 사업비 상향 조정 및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 등의 전면 개편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광주 전남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분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마을 신안 '퍼플 섬' 세계가 인정하다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섬마을. 이른바 '퍼플 섬'(purple island)으로 이름난 신안군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뽑혔다. 섬에 색깔을 입히고 생태 환경을 살린 신안군과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세계 우수 관광마을'은 자연·문화·자원 의 보존과 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꾀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마을들을 유엔세계관광기구가 평가한 뒤 3개 등급으로 나눠 선정하는데, 반월·박지도가 이중 가장 높은 등급(World Label)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치열한 경쟁 끝에 44개 마을이 인정을 받았다. 반월·박지도의 퍼플 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섬 컬러 마케팅 성공 사례로 꼽힌다. 섬에 자생하는 보랏색 도라지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7년 나무다리

를 시작으로 지붕·정원, 심지어 주민들의 옷에까지 보랏색을 입혔다. 덕분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고 외신들의 극찬도 이어지고 있다. 마드리드 총회에 초대돼 시상식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독특한 컬러가 있는 섬을 만든 것을 유엔과 전 세계가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월·박지도가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쾌거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자연적·문화적 특징을 살려 마을을 재생시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전남도내에는 이 밖에도 잠재력이 있는 명소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퍼플 섬'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대선 주자로 등록한 허경영 씨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지지 호소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위로와 함께 지지를 당부하는 그의 전화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매우 당혹스러웠다. 허 후보는 지난 달 22일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 모습을 나타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그는 대선 주자들 옆에 스스로 좌석을 마련해 앉는가 하면, 호명되지 않았음에도 유력 대선 주자들과 함께 현화에 나서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허 후보는 지난 달 18일 국가혁명당 대선 주자로 중앙선관위에 제20대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출마다. 취임 두 달 이내에 18세 이상 전 국민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황당한 공약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그런 허 씨를 정상적인 대선 주자나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하늘공'이 사이버 종교단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늘공에서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물론 이에 대해 국가혁명당 측에서는 '허경영 후보에 대한 음해 공작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행보는 거침없다.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부통령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방평책' (?)을 제시하는가 하면,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수 없는 공약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는 3~4%대의 지지율로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비호감 대선'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지지율 5%를 넘겨 대선 주자 토론회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편이다. 정치 회화의 끝판 왕인 그의 존재감은 사회 전반의 정치적 냉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쓸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